

인터뷰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지방 중소 건설업 활성화 견인해주길”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자부심, 아파트 바닥 시공 기술 혁신으로 층간 소음 해소해야 —



이 시 복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신임회장

이시복 벽강종합건설 대표가 제주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이시복 회장은 지난해 6월 회원사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제26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회장 취임 이후 이시복 회장은 회원간 소통의 중심이 되는 ‘열린 협회’를 만드는 한편, 종합건설업계의 수주 물량 감소를 초래하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를 최소화하고, 저가 수주 경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최근 행안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시복 회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공동주택의 외관 및 실내 구조, 그리고 마감재 등은 날로 세련되고 우수해지고 있지만 소음과 진동을 막는 기술은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젠 집을 짓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거주자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아파트 바닥 시공 기술을 혁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달 22일 건설협회 제주도회에서 이시복 회장을 만나 건설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먼저,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6월 지역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취임하셨는데 회장 취임 이후 제주도 건설산업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오셨는지요?

제주도회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개인적인 영광을 뒤로 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물량은 전국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업체 수는 전국 대비 3%를 나타내 과당 경쟁 체계를 보인 지 오래됐습니다. 또한 최저가, 턴키, BTL 공사 등 도외 대형 건설업체에 유리한 공공공사 발주 증가로 제주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공사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운 현황을 설명 드리고, 대형 공사의 분할 발주,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등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확대를 위한 일들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제주시 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조경 공사'의 지역 제한 발주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등을 통해 나눔 경영 실천과 아울러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회원간 소통의 중심이 되는 열린 협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협회가 존재하는 큰 이유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회원사와 적극 소통하며, '회원사가 중심이 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는 항상 낮은 자세로 회원사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사가 같이할 수 있는 건전한 행사를 발굴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건설경기는 어떠한 상황이며, 제주도회 회원사들의 수주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2~3년 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민간 주택건설 부문이 뒷받침해줘서 그나마 도움이 됐는데 작년 연말

인터뷰

부터는 민간부문까지 동반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회원사의 신규 수주 금액은 7,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관공사는 2,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고, 민간공사도 4,297억원으로 10%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신규 수주 총액이 웬만한 국내 1개의 중견 건설업체의 수주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업체 수는 대구, 대전, 광주, 울산보다도 많습니다. 이러니 과당 경쟁에 따른 업체의 채산성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시설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인프라 구축에는 제주 건설업체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들을 건설하시면서 느꼈던 감회와 아쉬움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2002년 4월 정부는 제주를 21세기 동북아의 관광·휴양·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1차로 2002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계획상 투자 규모는 공공부문 14조 8,527억원, 민간부문 18조 8,082억원, 공사·공단 1조 7,130억원 등 총 35조 3,739억원이었습니다. 그간의 투자로 제주에는 국제공항 여객처리 능력

이 1,144만명에서 2,547만명으로, 제주항 접안시설이 2만톤급에서 8만톤급으로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6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및 인프라도 상당 부분 구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발전하는 데 있어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기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대표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6대 핵심 프로젝트(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인 경우도 총투자 규모 6조 5,533억원 대비 투자 실적은 14.2%(9,318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투자 실적은 양호한 반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투자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각종 규제 완화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선점 효과를 보기도 전에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공사는 규모의 대형화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점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립한 ‘제2차 제주개발센터(JDC)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이고, 사업비는 7조원 상당입니다. 2차 시행 계획을 계기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 첨단 지식산업도시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늘리는 문제 등 입·낙찰 이슈들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낙찰 문제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원도급보다는 하도급자, 수도권 업체보다는 지방 업체의 피해가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대·중·소 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방 건설산업이 존폐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리고 턴키 등 기존 입찰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대형 공사 입찰제도가 기술제안입찰제도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입찰 방식은 턴키보다 입찰 부담이 낮기 때문에 중견 건설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술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기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 전에 기술제안입찰제도가 확산된다면 결국 턴키 방식과 똑같은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술제안 대상 공사 선정 기준을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요구되는 공

사로 완화하여 실질적 기술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지역 중소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야 합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침체는 지방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아닌 대·중·소 업체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대기업은 경쟁에 맡기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들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회는 2009년부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공사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 부처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마침 지난 2012년 10월 10일 김기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금액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법률안이 개정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